# 광주 적설량 0㎝ '눈 없는 겨울'

## 대륙고기압 영향에 건조한 날 이어지며 눈구름 서해쪽에 머물러

## 1998년이후 처음…진눈깨비만 흩날리고 공식 적설량 기록 없어

"눈사람 만들고 싶은데, 펑펑 내리는 눈을 한번도 못 봤어요. 눈은 언제 내릴까요?"

문송은(11·광주시 서구 쌍촌동)양의 올 겨울 소원은 함박눈이 내리는 날 옥상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눈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송은 양의 소원과 달리 올 겨울 광주에선 유독 눈이 내리지 않고 있다. 예년과 달리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8일까지 두 달 가까이 눈다운 눈은 단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진눈깨비만 한두 차례 흩날렸을 뿐이다.

올 겨울 광주지역은 1998년 이후 20년만에 '눈 없는(적설량) 12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8일)까지 적설량(積雪量)이 없다. 이는 지난 1998년 12월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지난 20년간(1999~2018년) 광주(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기준)의 12월 평균 적설량은 25.6㎝이었다. 지난 2005년 12월이 111.6㎝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 12월 55.5㎝, 2009년 12월 47.3㎝ 순이었다.

가장 적게 내렸던 해는 2016년 12월로 1.9㎝였으며, 지난 2017년 12월은 7.4㎝를 기록했다.

올 겨울 광주에 공식 적설량 기록은 없지만, 지난해 12월 7일 광주지방기상청의 공식 관측지점인 운암동에 눈발이 날리면서 첫눈으로 기록됐다.

올 겨울 광주에서 관측된 첫눈 내린 날도 평년(1981~2010년)에 비해 12일, 2017년 비해 14일이나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이처럼 광주에 눈이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눈 구름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겨울 북서쪽의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눈 구름 형성도 미비해 눈이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눈이 내리지 않자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눈과 비 소식이 없어 중기예보기간인 오는 18일까지 건조주의보 발령 지역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시베리아의 찬 공기와 온화한 서해의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상층공기의 기온차)에 의해 발생한 눈 구름의 영향으로 눈이 내린다"면서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바람의 세기가 부족해 눈 구름이 서해쪽에 머물면서 광주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오늘 첫 재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공천 대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는 별도로 김씨와 윤 전 시장,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 총 6명이 연루된 부정 채용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사전선거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죽음으로 이어진 술자리' 폭행치사 혐의 40대 영장

'죽음으로 이어진 일주일간의 술자리' 〈광주일보 2019년 1월7일자 6면〉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숨진 이모(50)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7일 이씨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했다는 부검의 소견 등을 확보해 김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5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원룸에서 화장실을 4~5차례 이용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 홧김에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룸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추워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인 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발길을 옮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25t트럭 맥주 200여 상자 도로위 '와르르' 교통 혼잡

8일 오전 11시 5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오모(48)씨가 몰던 25t트럭(일명 '탑차')에서 맥주 200여 상자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사진〉

당시 트럭이 넘어지지는 않아 특별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경찰과 소방, 군청 공무원 등이 깨진 맥주병을 치우기 위해 2시간여 동안 3개 차로를 통제해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맥주상자들이 원심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에서 넘어졌고, 적재함 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열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자녀 채용해줄게" 1억8천만원 가로챈 6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자녀를 채용해 줄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6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 등 3명에게 자녀를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자신이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A씨 자녀 등 3명을 거짓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복지법인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한 곳으로 이씨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위험한 낚싯배…3척 중 1척 승객 구명조끼 착용 안해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 낚시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낚시어선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명하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5년 295만여명에서 2017년 414만여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은 68만5978명으로, 경남(110만3051명)·충남(71만8866명)에 이어 전국 11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았다. 특히 최근 4년8개월간 낚시어선 사고는 전남이 170건으로 충남에 이어 2위였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척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척은 구명튜브를, 14척은 구조신호조명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또 소화설비 미비치 또는 비치수량 부족(16척), 구명줄 미보유(2척),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척), 신분증 미확인(14척)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담당의사 바뀌고 약처방 다르다" 우울증 환자 병원서 행패

쌍나팔

○…우울증을 앓던 40대 환자가 '담당 의사가 바뀌고, 약처방도 다르게 됐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서행.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43)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35분께 광주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 B(60)씨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수는 등 30여분간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지체장애 2급인 A씨는 이날 우울증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바뀐 담당의사가 복용하던 약을 바꾼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른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한 한국신문협회의 공개질의

(사)한국신문협회의 회원 신문사 및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12월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 Ⅰ.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에 맞서는 부처입니까?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신문협회,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합니까? 아니면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 신문협회 조사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 17.8%, '(전혀+별로) 필요하지 않다' 57.1%.

※ 리얼미터 조사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9%, 찬성이 30.1%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남.

### Ⅱ.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2017년)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16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지·케이블TV·디지털 등 타매체도 해마다 176억~183억 원씩 줄어들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상파TV 중간광고 재도입에 따른 타 매체 광고비 감소 규모(단위 : 억원)◀

| | 광고비 감소폭 | | | | |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신 문 | 201 | 206 | 210 | 213 | 216 |
| 잡 지 | 50 | 50 | 50 | 50 | 50 |
| 케이블TV | 108 | 110 | 111 | 113 | 114 |
| 디지털 | 18 | 18 | 19 | 19 | 19 |

※출처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이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한국신문협회, 2017)

다른 조사에서도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만 특혜를 주는 중간광고 도입은 미디어 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변수입니다. 매체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군소·유료방송 등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문협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숙고가 있었으며, 어떤 타협점이 발견됐습니까?

### Ⅲ.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결과를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사는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자구노력 없이 외부수혈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상파 방송 방만 경영 사례

① KBS·MBC는 올해 상반기 각각 441억 원, 536억 원 적자를 기록함. 올해 나란히 1000억 원대 적자 예상. 그럼에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은 60%에 이름.

▶KBS 연봉 1억이상 인원 현황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연봉 1억이상 인원(A) | 2,597명 | 2,670명 | 2,759명 |
| 총 원(B) | 4,530명 | 4,604명 | 4,596명 |
| 비 율(B/A) | 57.3% | 57.9% | 60% |

〈출처: KBS 자료 재구성〉

② KBS : 광고수입이 2013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4207억 원으로 급감해 영업 손실 상태인데도 해마다 승진잔치를 벌여 고액 연봉자 양산. 2016년 KBS의 인건비 비율은 35.8%로 MBC나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높음. 2013~2016년 4년간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178억 원 집행. 직원 복지는 좋지만 수신료가 총 수입의 40%가 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서는 안 됨.〈출처 : 감사원 자료〉

지금까지 지상파는 자구노력 촉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세지자 지난달에야 방통위에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특혜를 겨냥해 부랴부랴 만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진정성이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밝힌 자구 계획이 과연 중간광고를 허용할 만큼 합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자구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 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 Ⅳ.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의 핵심 이유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낮방송 허용, 2010년 가상·간접광고 허용, 2012년 심야방송 허용, 2015년 광고총량제 등 지상파에 특혜를 줄 때마다 등장해온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콘텐츠 질이나 시청률, 경영이 나아진 바 없습니다. 국정농단 보도과정에서도 신문과 종편이 이슈를 주도했을 뿐, 지상파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 Ⅴ. 부처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중간광고 도입은 법제상으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한 부처의 시행령이지만 사실은 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전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습니까?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2018년 12월 17일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내일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머니투데이 · 문화일보 · 브릿지경제 · 서울경제 · 서울신문 · 세계일보 · 스포츠서울 · 스포츠조선 · 아시아경제 · 아주경제 · 이데일리 · 전자신문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경제 · 한국일보 · 헤럴드경제 · 뉴스1 · 연합뉴스 · 강원도민일보 · 강원일보 · 경기일보 · 경남신문 · 경남일보 · 경북도민일보 · 경북매일신문 · 경북일보 · 경상일보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국제신문 · 대구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영남일보 · 울산매일신문 · 전라일보 · 전북도민일보 · 전북일보 · 제주신보 · 중도일보 · 중부매일신문 · 중부일보 · 충청투데이 · 한라일보(이상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의 발행인 일동